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호텔에서 한-뉴질랜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방산 협력 확대 軍물자협력 등 조속 추진”

文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방문

“경험과 기술 더해 남극연구 성과 기대
韓 국민, 뉴질랜드 출입국 편의 높여”

한국과 뉴질랜드가 신남방정책, 신태평양정책을 통해 아세안·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 유효하다고 재차 확인하면서도 시기보다 답방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과 뉴질랜드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와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를 국민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서로 강점을 가진 뉴질랜드의 농업 분야와 한국의 건설 분야에 상호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 한국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 호 진수식이 열린다”며 “우리는 진수식을 환영하며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극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남극조약 최초 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우수한 연구기술이 결합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요한 바이오·헬스케어·ICT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넓혀가기로 했다”며 “뉴질랜드는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고무인 일”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또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농·축산업 훈련비자,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전문직 비자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방안도 협의했다”며 “아던 총리님은 학생 시절 방한해 한국을 보다 잘 알게 됐다. 양국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더 자주 방문·교류해 서로를 이해·공감하는 게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뉴질랜드의 젊은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프로그램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나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로 이어진 5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농식품부, 무·배추 ‘수급안정’ 4.8만t 수매비축

가을배추 생산량 평년대비 6.1% 줄어

정부가 월동기 배추와 무의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3000톤, 무 1만8000톤을 수매비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추·무 가격 하락세에 대응하고, 겨울철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배추는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이 양호하나, 무는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의 경우, 가을배추 생산량은 평년대비 6.1% 감소하나, 월동배추 생산량은 평년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무의 경우, 가을무는 평년대비 2.1%, 월

동무는 6.1%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의 경우, 겨울철 이상기상 가능성을 감안해 3000톤 수준을 수매비축할 예정이며, 과잉 기조인 무의 경우 초과 공급 예상량을 단계적으로 시장격리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우선 12월 초과 공급 예상량 1만8000톤에 대해 4000톤 수준을 수매비축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 7000톤, 지자체(제주도) 자체 산지폐기 7000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상 악화에 대비해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추진해 월동기 배추·무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소·혁·공 3대 경제정책 유지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 필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년 하반기, 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날 것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리는 방안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상승률과 금액, 산업범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계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방향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이므로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의리가 없다”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작년 7월 홍 후보자는 언론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제임 시절 작성했다고 확인해줬다”며 “그걸 확인해줄 때 파급효과를 생각해봤는가. 과거 상사와 동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후보자가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고,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했다.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로서 의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연내 마무리

대법원 “징계피청구인 심의 대부분 종결”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4일 “전날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다”며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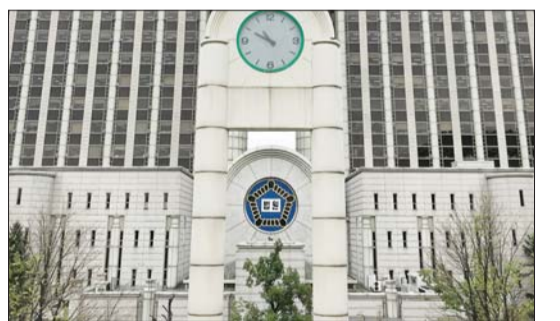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께 진행해 가급적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1·2차 심의 기일을 진행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서울 법원종합청사. /이병중 기자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농단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이 ‘찬성’으로 결론 난 상태다.

/이병중 기자 jaker@